

전남·광주, 양자산업 구축... 'K-퀀텀 클러스터' 공동 대응

내일 광주시청서 19개 기관 참여 업무협약 체결 산·학·연 협력 기반 연구·인력양성·사업화 추진

전남도와 광주시가 정부의 'K-퀀텀 클러스터 조성' 공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양자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호남권 미래산업 기반 마련에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와 광주시는 오는 21일 오후 2시 광주시청에서 '전남·광주 양자산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에는 양 지자체를 비롯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총 19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

협약 주체는 전남도와 광주시 등 2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남테크노파크, 광주테크노파크, 광융합산업진흥회, 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5개 지원연구기관, 전남대·목포대·순천대·조선대·광주과학기술원(GIST)·한국에너지공과대(KENTECH) 등 6개 대학, 삼성SDS·한전KDN·SK브로드밴드 등 6개 기업이 포함됐다.

전남도에서는 경제부지사가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전남과 광주가 공동으로 양자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서기 위한 협력 기반을 공식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기관들은 산·학·연 협력체계를 토대로 연

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기술 사업화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앞서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 1월 'K-퀀텀 클러스터'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공동 컨소시엄 구성에 합의하고, 2월부터 공동 기획과제 신청서 제출과 세부 기획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분야별 기획회의를 주 1회 씩 열고, 통합기획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는 등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측은 이달 말까지 공동기획서 초안을 마련하고, 5월 중 중앙부처 컨설팅 등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뒤, 5월 말 예정된 공모에 전남·광주 공동으로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K-퀀텀 클러스터'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해 양자산업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소당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된다.

클러스터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소부장, 양자센싱, 양자알고리즘 등 5

대 분야를 중심으로 최대 5개소가 지정된다.

정부는 올해 2월 선정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3월부터 6월까지 후보지 공모와 검토를 진행하고, 7월 양자전략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산업 기반과 연구역량을 결합해 양자산업 분야 국가 공모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주요과제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민주 광주시당, 광역의원 경선 순연

패자부활전 도입... 중대선거구에 정수 4명 증원

광주지역 광역의원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면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경선 일정과 방식을 조정했다.

19일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변경에 따라 후보자 경선 방식 일부를 조정하고 경선 일정을 하루 순연하기로 했다.

시당은 중앙당 당무위원회의 당규 개정 절차에 맞춰 당초 20~21일이던 1차 경선을 하루 늦춰 21~22일 실시할 계획이다.

1차 경선은 선거구 통합 후 중대선거구 개편 및 의원 정수 증원이 이뤄진 △동남갑 △북부갑 △북부구를 △광산구를 포함한 모든 선거구에서 기존 방식과 후보자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진행된다.

투표 방식도 기존과 동일하게 관리당원 ARS 투표로 진행되며 1일 차 아웃바운드, 2일 차 인바운드 방식이 적용된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 정수가 1명씩 늘어난 4개 선거구의 경우, 1차 경선 이후 '패자부활전' 형태의 별도의 추가 2차 경선을 진행한다.

광주시당은 1차 경선 탈락자 가운데 2

차 경선 참여를 희망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통합 선거구 전체 관리당원 투표를 실시, 1명을 추가 선출해 공천할 계획이다. 또 본선 기호(가·나·다 등)는 1차 경선을 통해 선출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통합 선거구 전체 관리당원 투표로 결정하고, 증원된 후보자는 후순위로 배치한다.

한편 전남 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따른 선거구 개편으로 광주에서는 4개 선거구를 중심으로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이에 따라 비례의원을 제외한 광주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나고, 전남·광주 통합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는 75명에서 79명으로 증가한다. 선거구 구조도 일부 지역에서 기존 1인 선출 방식이 3~4인 선출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당 간 경쟁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또 비례의원 비율이 기존 의원 정원의 10%에서 14%에서 바뀌고, 전남광주 통합선출 방식으로 정해짐에 따라 민주당 각 시도당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비례대표 후보 공천도 조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

전남도, 통합특별시 출범 핵심과제 점검 총력

정보시스템·조직·예산 등 분석·대응책도 논의

전남도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해 정보시스템과 조직, 예산 등 핵심 과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7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행정통합 주요 과제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상황과 재정,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회의는 황기연 행정부지사 주

재로 주요 실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통합 이후 행정 공백이나 서비스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는 시·도민이 행정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정보시스템 전환과 조직 정비 상황을 중심으로 준비 상태를 면밀히 확인했다.

또 그동안 네 차례 열린 전남·광주 행

정통합 정책협의체와 양 시·도 실무부서 협의를 통해 도출된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함께 점검했다. 통합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전남도는 통합특별시 출범이 전국 첫 광역 행정통합 사례라는 점에서 초기 안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정보시스템 통합과 조직 재편, 재정 운영 체계 구축 등은 출범 직후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꼽

힌다.

황기연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출범 과정에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한민국 첫 광역통합 모델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통합과제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광주광역시와 협력을 강화해 출범 전까지 남은 준비 과제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도, 밀리환초 강제동원 진상규명 착수

피해 576명 확인...위령사업·국가보상 건의 근거 마련

전남도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강제 동원된 전남 출신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에 본격 착수했다. 피해 실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위령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보상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에서 밀리환초 강제동원 피해자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과업 추진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조사 범위와 연구 방향을 발표할 뒤, 전문가 자문과 토론을 통해 보완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용역은 밀리환초 동원의 배경과 경로를 밝히고, 동원 규모와 구체적인 피해 양상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는 위령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추가 진상규명과 희생자 결성, 보상 지원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지역 차원의 추모를 넘어 국가 책임을 묻는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특히 단순한 문헌 정리에 머무르지 않고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구술 채록, 현지 조사도 병행해 사료 확보에 나선다.

전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역사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콘텐츠 개발로 연계할 방침이다. 밀리환초 사건은 태평양전쟁 말기 마셜제도 밀리환초에 동원된 조선인들이 기아와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저항 과정에서 학살당한 비극적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2025년 6월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공개한 일본 해군의 '해군군속신상조사표'를 통해 전체 피해자 640명 가운데 576명이 전남 출신으로 확인되면서, 지역 차원의 체계적인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강종철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우리 세대가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며 "단순한 조사를 넘어 지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전남건설현장 등 1683곳 안전 살핀다

6월 19일까지 취약시설 중심...안전 사각 해소 온힘

전남도는 도민 생활시설 안전 확보를 위해 건설 현장, 노후 건축물, 도로 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 산사태 취약지역 등 총 1683개소에 대해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61일간 집중 안전점검에 나선다.

점검은 어린이놀이시설, 요양병원, 어린이 테마파크, 전통시장, 쪽방촌, 외국인 근로자 시설 등 안전 취약계층 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남도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간협의체 등 279명의 전문가와 공무원, 도민,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시설 유형에 따라 드론, 열화상 카메라, 가스누출탐지기 등 전문장비를 의무 활용토록 해 점검의 정밀도를 높일 계획이다.

점검 기간 각 시군은 '주민점검신청제'를 통해 주민이 발견한 위험시설에 대해 전문가가 직접 안전점검을 한다. 전남도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를 통해 도 안전점검반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등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가정에는 자율 안전점검표를 배부해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점검 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은 재관리리금 등을 활용해 신속히 보수·보강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집중 안전점검은 2015년부터 정부·지자체·도민이 함께 참여해 지역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687개소를 점검해 현지 시정 279건, 보수·보강 486건, 정밀 안전진단 11건 등의 조치를 했다.

최용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급격 한 기후·사회 변화로 재난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도민들께선 일상 속 위험 요인을 꼼꼼히 살피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중대선거구 도입... 정치권 불멘소리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광주 일부 광역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된 가운데 지역 정치권 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광주 동남갑, 북부갑, 북부을, 광산구를 4개 선거구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만 정치개혁인 누더기 합의안에 분회 의장을 퇴장했다"고 지적했다.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불만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거대 양당 기득권 지키는 째름"이라며 "다양한 정당의 의회 진출이라는 취지를 거스르는 합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선출된 민형배 의원은 지역 의원

민형배 "불균형 해소 안돼"...이종욱 "기득권 지키는 째름" 광역의원 입지자 "혼란 기증...본선 기호 가짐 미적용 부당"

이에 따라 남구는 기존 1·2선거구가 통합돼 3명을 선출하는 '남구 1선거구'로, 북구 갑은 1·2·3선거구를 묶어 4인을 선출하는 '북구 1선거구'로 재편된다. 북구 을에도 5·6선거구를 통합해 3명을 뽑는 '북구 2선거구'가 신설된다.

광산구는 비아동을 분리해 3·5선거구와 통합, 3명을 선출하는 '광산 3선거구'로 개편, 각 선거구당 광역의원 1명씩을 더 선출하게 됐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반발이 일고 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광주 일부 지역에만 중대선거구를 시범 도입한 점을 두고 "거대 양당의 밀리지 않"이라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늬

중 유일하게 분회의 표결에 기권한 뒤 SNS를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 의원은 "광역의원 지역구 정수 조정이 4개 선거구 4명에 그쳐 통합에 따른 현저한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일고 있다. 특히 경선을 준비하던 민주당 일부 입지자들은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 할 것 같다", "본선 기호 투표에 가점 미적용은 부당한 처사" 등 혼란만 가중됐다는 불멘소리를 내고 있다.

북구 제4선거구 광역의원에도 도전을 내민 진보당 소재 후보는 "경선 선거구를 진보당 후보 출마 지역을 피해 묶는 민주당의 방식은 기득권 지키 실 야합"이라 비판했다.

이산화 기자 goback@gwangnam.co.kr